

열악한 의료 시스템 방치는 전남도민 기본권 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 시급한 이유
 고령인구·장애인 비율 전국 최고
 응급 전문의 인구 10만명당 1.4명
 섬지역 이송 중 사망 부지기수
 공보의에만 의존 필수 의료 공백
 취약지 특성 반영한 의대 설립 필요

전남도는 의료 서비스는 생활 형편과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헌법에서 정한 기본 권리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남도민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의료 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과 그들이 근무할 대학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가장 먼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지난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주춤한 뒤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열악한 전남의 현실...도민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전남은 고령인구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등록장애인 비율은 각각 전국 최고인 23.7%, 7.6%로 전국 평균(16.6%, 5.1%)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0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2.08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뇌혈관, 소아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0만 명당 1.4명도 전국 최하위다. 의사가 없는 섬은 164곳으로 유인도 276곳의 60%에 달해 실제 도서지역 이송 중 사망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응급헬기로 위급환

자를 이송하지만, 기상 요인(36.4%)으로 출동이 어려워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 의사 7915명이 증가할 때 전남에는 그 가운데 1.1%인 86명만이 증가했다.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상황이 호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보의에만 의존...전문성 미흡 우려, 응급의료 시스템 부실=2021년 전국 공보의 478명 가운데 전남에는 가장 높은 비중인 121명이 배치됐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의사가 필요한 공공보건 의료기관 24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 327명을 모두가 공보의 신분이며,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30분 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지자체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만큼 이를 대체할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이송병원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이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비율이 3.1%로, 전국 평균 1.6%의 2배에 이르며,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30분 내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는 56.8%에 달하고 있다. 모두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응급실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 비율, 중증 외상 비율도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도,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전남도는 무엇보다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과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이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보다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전남도와 전문가들은 기존 의과대학이 지역 소외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의료 취약지역의 특성(섬·농촌 등)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한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도 도입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되 일정기간 취약지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의 인력을 양성하면서 농어촌 의무 실습, 지방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 이해 강화 교육과정 등 지역 의료 인력 양성 특화 교육과정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의료서비스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시장실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법적인 강제나 공적비용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지역에 적정 배분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지역 의과대학별로 지역전형을 도입한 결과 졸업자의 68.3%가 지역에 정착하는 등의 실적이 있는 만큼 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국민 통합 먼저 고려해야"

오세훈·박형준 시장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 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현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은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

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또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 역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 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 시장 발언에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며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상반기에 1200만명+알파(a)는 차질없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질병청에서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함께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내달 초 대선출마 예고...“경제 전문성으로 차별화”

“대권 지지율, 꼭 필요할 때 뜬다”
 “윤석열, 때 되면 혹독한 검증 있을 것”
 “분권 위한 개헌 빠를수록 좋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대선 출마와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 중로 사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 지향적인 경제 재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히고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전 총리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경쟁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평가가 절하했다. 그는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지지율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면서 "미국은 언론이 중심이 돼 후보에 대해 양파껍질 벗기듯 한 겹 한 겹 벗겨서 검증하는데, 때가 되면 그런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율이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즐겁기야 하겠느냐"면서 "아마 꼭 필요할 때 뜨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개혁과 민생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니 주어진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면서 "억울해질 것은 없고 철저히

반성하고 쇄신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대응과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방향은 맞았지만, 실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개혁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11월 집단면역 달성 논란과 관련해 "일정에 차질이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데 왜 시비를 자꾸 거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절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직 시 책임총리로 역할을 다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한 뒤 "솔직히 대통령 중심제 하 인사와 관련해 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분권을 위한 개헌은 꼭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생태수도 순천, 지방교육자치를 꿈꾸다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
 위기의 전환, 모두앳학교와 순천특화 과정 운영
 교육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앴다, 교육이 분모가 되는 순천!

